

## 【 주간 이슈 】

## 소득보상보험 활성화 방안

조재린 연구위원

- 우리나라에서도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도입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음.
  - 소득보상보험(Disability Insurance)은 생존보장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취업불능상태가 될 경우 소득상실 이전 소득수준의 일정 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임.
  - 공적 소득보상보험으로 국민연금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이 있으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.
  - 미국·영국·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편화된 가운데 공적 소득보상보험을 보완
- 소득보상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상실위험을 폭 넓게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이 필요하나 도덕적 해이 우려로 상품개발과 판매가 제약을 받고 있음.
  - 보장내용이 재해 1~3급 장애 시, 고액치료비 관련 질환으로 입원 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이 약함.
  - 이로 인해 다양한 소득상실 위험을 보장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.
  - 또한 도덕적 해이 우려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판매도 부진한 상태
- 소득보상보험의 활발한 상품개발과 판매를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방안 마련이 급선무임.
  - 타 상품에 비해 보장내용이 복잡한 소득보상보험은 클레임 검증을 위한 표준시스템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임.
  - 적극적인 클레임 검증과 더불어 클레임 발생가능성을 예방하고 보험금 청구자의 조기 복직을 위한 복직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
  - 단체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거나, 공적 소득보상보험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

## 1. 논의 배경

-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고자 우리나라에서도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도입되었으나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음.
  -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은 가정의 생계와 자녀교육을 곤란하게 하며 나아가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음.
  -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도덕적 해이 통제를 위한 체계적 방법 구축 미비가 주로 지적됨.
  
-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공적 소득보상체계로는 국민연금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이 있으나, 소득상실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함.
  - 국민연금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1~4등급으로 구분하여 연금을 지급하나, 지급기준이 까다롭고 소득대체율 또한 매우 낮음.
    - 장애 1급의 경우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 월평균 300만원에 대해 월 59만원을 지급
  - 한편,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나, 대부분의 장애는 업무와 관련 없는 원인으로 발생함.
    - 미국의 경우 90%에 달하는 장애가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함<sup>1)</sup>.
  
- 따라서 공적 소득보상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소득상실분을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완할 필요가 있음.
  - 미국·영국·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사적 소득보상보험(Disability Insurance)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공적 소득보상보험 기능을 보완함.
  
- 본고는 우리나라 사적 소득보상보험의 현황을 살펴보고,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.
  - 안정적인 가계생활을 위해 사적 소득보상보험은 향후 꾸준한 수요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, 장기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도덕적 해이 완화방안을 살펴볼 것임.

1) National Safety Council, Injury Facts 2008 Ed.

<표 1> 미국의 소득보상보험 가입 현황(2003년)

종류	피고용인 전체	전문직, 기술직	사무직, 판매직	서비스업
단기소득보상보험	37%	40%	44%	20%
장기소득보상보험	28%	40%	20%	10%

자료 :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: Employee Benefits in Private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, 2003. U.S. Department of Labor, Bureau of Labor Statistics.

## 2. 소득보상보험의 정의와 현황

### 가. 소득보상보험의 정의와 형태

□ 소득보상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취업불능상태가 될 경우 소득상실 이전 소득 수준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임.

○ 소득보상보험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 소득보상보험과 사적 소득보상보험으로 대별됨.

□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함.

○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보상보험의 형태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임.

- 영국은 국가보험(National Insurance), 미국은 소득보상사회보장보험(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)이 있음.

- 이 프로그램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소 생계를 지원함.

○ 독일, 프랑스, 영국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공적보험을 통해 상병수당의 형태로 소득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.

- 이 제도는 지급금액의 상한이 낮고 지급기간의 제한이 있어 보상이 충분하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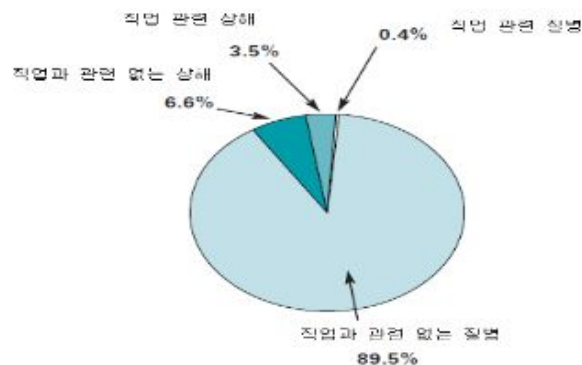
○ 산재보험은 업무와 관련된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피고용인에게 지불하는 보험임.

- 호주는 법정 의무보험(Statutory Compensation), 미국은 노동자보상보험

(Worker's Compensation) 제도를 가지고 있음.

- 그러나, 산재보험은 업무와 무관한 장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, 장애의 대다수는 업무와 관련이 없음.

<그림 1> 장애의 원인별 비중



자료 : National Safety Council; JHA 2002 U.S. Group Disability Rate and Risk Management Survey

□ 따라서 공적 소득보상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편화되어 있음.

- 사적 소득보상보험은 피보험자가 업무와 무관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함.
- 보장기간에 따라 단기소득보상보험 장기소득보상보험이 있고, 가입주체에 따라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이 있음.
  - 단기소득보상보험(Short Term Disability Income Insurance Plan)은 보통 6개월에서 2년 동안 일할 수 없을 때 현재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
  - 장기소득보상보험(Long Term Disability Income Insurance Plan)은 보통 2년 이상 동안 일할 수 없을 때 현재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형태나, 정기지급 또는 퇴직나이(65세)까지 지급하는 형태 등 다양한 플랜이 있음.
- 이밖에 고한도 소득보상보험(High-Limit Disability Insurance), 핵심인력 소득보상보험(Key-Person Disability Insurance) 등 다양한 소득보상보험이 있음.
  - 고한도 소득보상보험은 전통적인 소득보상보험의 경우 보상한도가 낮아 고소득층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기 위한 상품
  - 핵심인력 소득보상보험은 핵심인력의 장애로 인한 인력누수 시 회사의 임시직 또는 대체인력 고용비용을 총당하는 보험

<표 2> 사적 소득보상보험의 전형적인 형태

	단체보험		개인보험	
	단기소득보상보험	장기소득보상보험	단기소득보상보험	장기소득보상보험
보험금 지급기간	장해발생 1~30일 후부터 90~180일까지	장해발생 90~180일 후부터 65세까지	장해발생 7~30일 후부터 2~5년까지	장해발생 30~90일 후부터 65세까지 또는 종신
보험료	- 개인보험보다 저렴 - 매해 효율이 갱신 - 보통 고용주가 부담		- 단체보험보다 비쌌 - 보통 효율이 변하지 않음 - 피보험자 개인이 부담	
보험급부	- 소득에 맞춰 매해 증가 - 급부가 소득에 따라 정해짐 - 사회보장이나 산재보험에 따라 급부가 줄어들음		- 계약 시 보장금액이 정해져 있음 -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이나 산재보험에 영향을 받지 않음	
세제	-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세제혜택이 있으며, 보험급부에는 세제혜택이 없음		-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세제혜택이 없으며, 보험급부에는 세제혜택이 있음	

나. 우리나라 사적 소득보상보험의 현황

□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도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도입되었으나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음.

-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의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실손상품은 거의 판매되고 있지 않고, 재해 1~3급 장해 시, 고액치료비 관련 질환으로 입원 시 등으로 사적 소득보상보험의 보상내용이 국한되어 있어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이 약함.
- 이로 인해 다양한 소득상실 위험을 보장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.

□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득상실위험에 대한 다양한 고객니즈를 충족시키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나, 소득보상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 우려로 보험회사들이 상품개발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실정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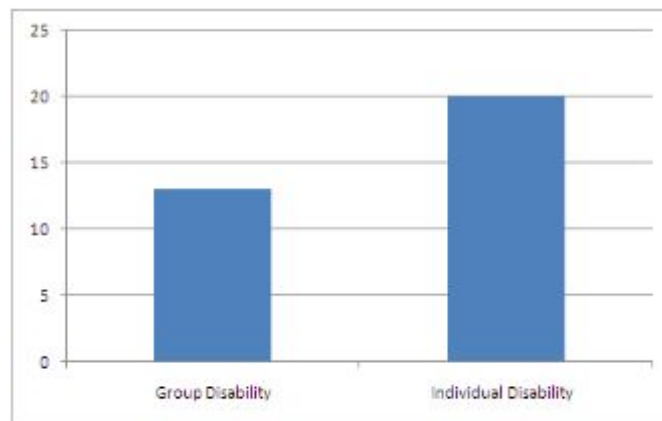
- 소득보상보험의 경우 중상이나 중질환 이외의 소득상실위험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로 상품개발에 소극적
- 장해등급 판정에서 의료기관의 주관 개입 여지가 많은 점도 소극적 판매의 원인임.

### 3. 클레임 검증과 복지프로그램

- 소득보상보험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클레임의 집중적인 검증이 필요함.
  - 소득보상보험은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클레임 청구 건수가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, 그 변동 또한 클 수 있음.
  -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소득보상보험은 부담보기간을 설정하고 있음.
  - 1980년대 들어 북미지역 보험회사들은 클레임의 적극적인 검증에 더욱 중점을 둠.
    - 적극적인 클레임 검증은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으나, 근본적으로 클레임을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.
-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미를 중심으로 복지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추세에 있음.

<그림 2> 클레임 관리 및 복지프로그램의 투자 대비 성과(1달러 투자 당)

(단위 : 달러)



자료 : HIAA Survey of Disability Management Programs

- 장애기간을 줄이고 영구장애로 이어지는 증상을 막기 위하여 장애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이 쉽게 복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프로그램이 도입됨.
  - 치료프로그램은 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, 예방프로그램은 며칠 동안 일을 하지 못한 후 또는 병가 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프로그램임.

- 복직프로그램은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을 빠른 시일 내에 직장에 복귀시킴에 따라 클레임을 감소시키고 보험회사의 사업성과를 개선함.
- 클레임관리 또는 복직프로그램에 대한 1달러 투자 당 사업성과는 단체보험은 13달러, 개인보험은 20달러 개선효과가 있음.
- 또한 보험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보험금 지급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취업불능상태의 근로자에게는 회복을 위한 동반자로서, 그리고 해당 회사에는 경영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.

#### 4. 소득보상보험 활성화를 위한 장기방안

-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클레임 검증 시스템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.
  - 타 상품에 비해 보장내용이 복잡한 소득보상보험은 클레임 검증을 위해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가 필요함.
  - 장해정도 판정에서 의료공급자와 보험회사의 판단 상충 시 이를 대비한 표준화된 규정 마련이 요구됨.
- 클레임 가능성을 예방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이 조기에 복직할 수 있도록 복직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.
  - 복직프로그램을 통해 클레임을 줄이고 사업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음.
  - 또한, 복직프로그램이 취업불능상태 근로자의 조기복귀를 돕고, 기업에게는 인력손실에 따른 피해를 축소시키는 등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역할을 제고함.
- 소득보상보험을 단체건강보험 및 연금보험과 패키지로 판매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.
  - 고한도 소득보상보험이나 핵심인력 소득보상보험 등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적은 상품을 개발하여 단체 소득보상보험과 함께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공적 소득보상보험과 연계된 상품을 개발하여 과도한 보상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.
- 국민연금장애연금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사적 소득보상보험은 그 보상액만큼이 제외된 금액만을 지급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유인을 줄일 수 있음. KiRi